

KNSI REPORT

특별
기획

제 10호 2006/09/21

아베총리체제 등장과 동아시아

기획 취지

일본의 전후세대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9월 20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아베총리체제는 헌법 9조의 개정 혹은 삭제와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개정문제는 전후 일본이 취해왔던 전수방위나 집단적자위권의 불행사 등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과거역사에 대한 일방적인 단죄와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하는 '역사수정주의'는 일본사회의 보수화를 더욱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 코리아연구원은 아베총리체제등장이 정치·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진단하고 전망했다.

- 아베총리체제와 한일관계 : 전망과 과제 (이원덕 :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아베총리체제와 북일관계 전망 (조진구 :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 아베총리체제와 동아시아 FTA 추진 전망 (김양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베체제의 등장과 중일관계 : 쟁점과 전망 (윤영덕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시간강사)
- 아베총리체제의 개헌구상과 일본 안보정책 전망 (조양현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아베총리체제와 한일관계 : 전망과 과제

(이원덕 :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 I. 정치인으로서의 아베
- II. 아베 신정권의 등장 의미
- III. 아베 정권의 대 한반도 정책성향 분석
- IV. 아베 정권의 대한정책 전망과 평가
- V. 한일 관계 개선의 호기

I. 정치인으로서의 아베

아베신조(安倍晋三) 신정권의 출범이 향후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를 두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대다수의 미디어는 대체로 아베의 이념적 우익 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아도 경색되어 있는 한일관계가 더 한층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의 기존의 행적이나 발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 역사교과서, 자위대, 헌법개정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등 우리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일관계가 더욱 험악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아베의 출신지는 주지하다시피 과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침략 및 지배의 주역들을 집중적으로 배출한 아마구치(과거의 쇼슈 번) 현이다. 가계만 보더라도 동경재판에서 A급 전범의 판결을 받고서도 후에 수상을 역임한 바 있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그의 외조부이며 자민당 보수 분류의 전통을 잇는 사토 에이사쿠 또한 그의 작은 외조부에 해당한다. 부친은 80년대 자민당의 유력한 리더 중 하나인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전 외상이다. 그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를 비롯하여 그가 행한 기존의 언행 그리고 정치적 행보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그의 성향이 일본적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보면 복고적 국가주의의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우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아베는 전후 일본의 총리 중에서 가장 우파적 성향이 농후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는 정치이념 면에서 보면 평화헌법 개정 및 미일안보 개정에 헌신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가장 빼닮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막말 정한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이기도 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라는 점도 그의 이념의 일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그의 DNA 속에 내장된 정치이념이 골수 보수우파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II. 아베 신정권의 등장 의미

아베는 5년여 동안 성공적으로 장기집권을 유지해 온 고이즈미 정치의 충실한 후계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베는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내각관방 부장관과 장관을 각각 역임했으며 자민당의 최고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간사장 및 간사장 대리직을 맡아 누구보다도 고이즈미 정권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 또한 고이즈미와 더불어 자민당의 잇따른 선거 승리를 이끄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베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고이즈미의 후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고이즈미와 아베는 자민당 내 모리 파 출신으로서 보수색이 짙은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 점이 많지만 엄밀히 들여다 보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이즈미 수상은 임기 내내 고집스럽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우파적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보면 고이즈미는 신보수주의적 성향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고이즈미는 수상에 오르기 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참배는 신념 차원의 행위라기보다는 자민당 총재선거 전략의 방편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그의 신사참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전통적 보수층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학적 고려의 산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고이즈미는 임기 중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서 억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주일미군 및 자위대의 재편 과정에 대해서도 온건한 입장을 견지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일본 내 강경일변도의 대북 여론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두 차례나 방문했으며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 대신 고이즈미는 우정 개혁을 비롯한 도로 공단 민영화, 행정 관료의 기구축소 및 규제완화 등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했다. 한편으로 그는 자민당의 파벌구조와 그를 뒷받침하고 있는 구시대적 정치관행을 타파하는데 앞장 섰으며 정치의 주도권을 관료집단이나 자민당의 파벌 영수로부터 수상관저로 가져오는데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집권기 내내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시장 확대 전략과 낡은 자민당에 대한 혁신적 개혁 노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아베는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노선에 공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아베 정치의 주안점은 오히려 신보수주의적 성향의 정책 추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베가 총재 선거전에서 최우선적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환경조성과 교육 기본법의 개정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아베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한 군사적 보통국가의 실현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한 애국심의 고양을 주된 정치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정치 지향은 향후 일본의 외교정책에도 상당히 크게 투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외교기구의 확대개편 및 외교력 강화를 통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의 추구, 방위청의 성으로의 승격 추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확대, 자위대 해외파병의 항구화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하자면 아베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 노선보다는 신보수주의적 외교안보 정책의 태세 정비에 정치적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III. 아베 정권의 대 한반도 정책성향 분석

아베는 일본이 전후 체제에 안주하여 대세에 영합하는 외교적 관성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이 대한 정책에도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된다면 현해탄의 파고는 더욱 거세고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일관계의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아베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및 자세를 그의 저서나 언행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야스쿠니 참배문제와 관련해서 아베는 기본적으로 “일국의 지도자가 순국한 사람들에게 예를 다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행해지는 행위이며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의거한 추도방식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노예제를 옹호했던 남군 장병에 대해 추도를 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노예제를 옹호하는 것과 연결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야스쿠니 참배와 역사인식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야스쿠니 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한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가 기본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를 일정 부분 구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지만 한편으로 독도 문제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표명하고 있다. 즉, 그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독도분쟁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에 힘쓰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봄 독도주변 해역의 일본 측의 해저측량 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독도 분쟁에 대해서는 아베 자신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아베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우익세력이 주도하는 ‘역사수정주의 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 관여해 왔다. 그는 역사교육 의원연맹 등 우익적 교과서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A급 전범에 대해서도 저서에서 “동경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라는 전쟁 후 만들어진 개념에 의해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편의상 A급이라고 부를 뿐 죄의 경중과는 관계가 없다. 국내법상으로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무라야마 총리의 과거사 사죄를 담은 담화문에 대해서도 “내각은 새로운 입장표명이 가능하다”고 언급함으로써 기존의 일본정부가 표명해 온 공식적인 사죄, 반성론 입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역사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바 있다.

넷째, 대북 정책에 관해서 아베는 초강경 대북 정책을 주도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납치 일본인 문제에 대해 아베는 북한과의 교섭에서 일체의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일본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였다.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는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아베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유엔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일본 외교의 승리이자 전환점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아베는 집권 후에도 대북 경제제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V. 아베 정권의 대한정책 전망과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의 우파적 정치이념과 대한반도 정책의 강성 태도만으로 보면 아베 정권 하의 한일관계가 그다지 순항할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만약 그의 이러한 이념과 정책 성향이 대 한반도 정책으로 그대로 표출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한일관계는 갈등과 마찰이 격화되어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우파 성향이 짙은 이념과 강성 정책 성향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과의 충돌을 마다 않는, 강경 일변도의 방향으로 질주할 것으로는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라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아베 정권은 우파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 한반도 정책에서 의외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자세와 접근으로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고정 관념에 입각한 예단에 근거하여 대일 정책을 구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 정부로서도 열린 마음으로 폭 넓은 옵션을 가지고 아베 정권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필자가 아베 정권이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의외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데는 몇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다.

첫째, 아베 정권은 극단적으로 악화된 한국,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느 정도 복원시켜야 할 정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고이즈미 수상의 거듭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일본의 근린 외교는 파탄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정상회담이 단절된 상황이 5년째 지속되어 왔으며 한국과도 정상간 셔틀 외교가 야스쿠니,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 작년 6월 이래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외교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는 여전히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중단으로 상징되는 정부 간 관계의 경색 상황이 초래하는 제반 분야에의 악 영향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베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이고 국민 여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 중국과의 최소한의 관계 정상화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둘째, 아베는 납치문제에 대한 단호한 자세로 일약 스타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 단숨에 수상의 자리에 안착하긴 했지만 정치적 경륜이나 당내 지지기반으로 보면 그다지 탄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베 정권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순항하기 위해서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민당 내에서도 52세의 최연소 총리등장이 초래할 지도 모르는 급격한 리더십의 세대교체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고 있다. 게다가 작년 9.11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으로서는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승리하기란 간단치 않은데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가 이끄는 민주당은 자민당의 근린 외교 실패를 끈질기게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아베 정권은 당내외의 견제 속에서 참의원 선거를 무난히 치루기 위해서라도 전격적인 대중, 대한 관계의 개선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야당의 비판의 예봉을 꺾음과 동시에 가시적인 외교업적을 과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아베의 정치인으로서의 이념과 정책 성향이 아베 정권의 대한정책으로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논법이 아닐 수 없다. 전후 일본의 보수외교의 전통에서 볼 때 수상 개인의 정치 이념과는 무관하게 유연한 대외정책을 펼친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하토야마 수상은 보수적 이념성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계하는 대소 국교정상화를 단행하였다. 또한 전후 우익의 상징적인 인물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표류하고 있던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구보다 발언과 역청구권 철회를 주장하는 이승만 정부에 전격적인 양보 정책을 취한 바 있다. 1980년대 보수의 원조 격인 나카소네 수상은 야스쿠니 공식 참배 이후 한국과 중국의 격렬한 항의에 직면하자 집권기간 중 참배 철회의 결단을 내리고 전격적인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일본 보수외교의 전통이 지도자의 정치이념의 원리주의적 실현보다는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국가 이익을 냉철하게 계산하는 리얼리즘에 충실한 노선을 답습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아베는 이념적인 강성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부드러운 품성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과도 알기 쉽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과묵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좀처럼 꺾으려 하지 않는 고이즈미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는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의 저서에서도 “나는 한일관계는 낙관주의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다. 그가 일본 외교에서 한국이 지닌 비중을 어느 정도 크게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한국과의 우호친선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의 사고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V. 한일 관계 개선의 호기

아베 정권 하의 한일관계는 그의 이념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낙관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된다. 지금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관해 아베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삼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적어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참배를 자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한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는 일단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 탐색을 통해서 고이즈미 수상이 일그러트린 한, 중과의 근린외교 복원의 분위기 형성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5년여 만에 찾아온 일본의 정권 교체는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는 대일 관계의 개선의 호기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작년 봄부터 급속도로 차가워진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 측이었다. 독도, 교과서, 야스쿠니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의 출발점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고이즈미 정권의 무신경한 선제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분쟁이 지나치게 격화된 데는 한국 측의 역사 원리주의적인 과잉대응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보수적 인사들은 사석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 포스트 노무현 정권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포스트 고이즈미 정권의 출범이야말로 한일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조건 없이 만나 솔직하고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데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시작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취임인사 차 최초의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극적인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경우 독도, 역사인식, 대북정책 등 민감한 대립 현안에 대해서는 단기적 해법 도출이 어려운 만큼 원칙적인 입장만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일 정상회담의 재개가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중일관계는 급속도로 풀려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대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요구는 수상, 외상, 관방장관의 야스쿠니 공식참배 중단으로 요약된다. 중일관계가 정상화 되는 가운데 한일관계만이 경색 국면을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외교적 옵션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로 말미암아 한반도 정세가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일 간 대화 및 의견 조율은 우리에게 급무로 다가오고 있다. 아베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대일관계 개선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기대해 본다. (2006/09/21) **KNSI**

● 아베총리체제와 북일관계 전망

조진구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I. 전후 최연소 ‘전후세대’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체제의 등장과 그 의미

II. 고이즈미 대북외교 막후 조정자로서의 아베

III. 아베체제 출범 이후의 북일관계 전망

I. 전후 최연소 ‘전후세대’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체제의 등장과 그 의미

2006년 8월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시에서 열린 후원회 모임에서 사실상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후세대가 책임을 져간다는 기개(氣概)를 가질 때가 왔다고 말했다. 9월 20일에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아베 관방장관 이외에 아소 타로(麻生太郎) 외상,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재무상 세 사람이 입후보했지만 아베 장관의 당선 이 거의 확정적이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소 외상과 다니가키 재무상은 각각 6%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반면 응답자의 55%가 아베 장관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자민당 지지층의 74%만이 아니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지지층의 46%, 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지지층의 45%와 32%가 아베 장관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毎日新聞, 2006.9.8).

세 사람의 후보 가운데 전후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954년 9월 21일생인 아베 장관뿐이며, 9월 26일에 개최될 중의원과 참의원 합동 본회의에서 제90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 만 52세로 전후 총리 가운데 최연소다.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 전쟁을 체험한 세대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국회의원들의 세대교체가 현저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4년 8월의 시점에서 소학교(초등학교) 재학 이상의 나이에 종전을 맞이한 의원의 비율은 중의원이 약 16%, 참의원이 약 23%에 불과하다.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했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는 그해 7월 총리가 되었을 때 54세였지만 1918년생이다. 또한 1993년 8월 소위 ‘55년 체제’가 붕괴하면서 등장했던 비(非)자민당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는 55세에 총리가 되었지만, 1938년생으로 전후세대가 아니다.

최근 한일 및 중일관계가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되는 아스쿠니신사 참배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뒤에는 과거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역사인식이나 향후 일본의 국가진로 혹은 국가상(國家像)을 둘러싼 인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야당에 관계없이 전후세대의 젊은 의원들일수록 지난 전쟁에 대한 반

성이나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과 헌법 개정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전후 50주년을 맞이하여 자민, 사회 및 사きが케 등 연립3당이 중의원에서 ‘역사를 교훈삼아 평화 결의(決意)를 새로이 하는 결의(決議)’를 채택하려 하자 1961년생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중의원 의원은 3월 16일 외무위원회에서 자신과 같은 전후세대는 당사자가 아니라 반성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같은 해 8월 15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가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담화를 발표할 때 자민당의 중참의원 161명이 ‘종전50주년국회의원연맹’을 결성하여 반대했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5선 이하의 젊은 의원들은 1997년 2월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일본에서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현 농림수산상이 대표를 아베 현 관방장관이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이 모임은 2001년 6월 초당파 의원연맹 ‘역사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회장: 나카가와 쇼이치)으로 확대되었다.

9. 11 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은 2001년 10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해상자위대의 보급함과 호위함을 인도양에 파견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 나타난 정부의 헌법해석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신세기의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이다. 결성 당시 이들은 유사법제의 정비,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의 변경,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새로운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방위력의 정비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미 유사법제는 만들어졌으며, 모임의 결성을 주도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2002년 9월 30일 고이즈미 내각의 제1차 개각에서 방위청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당초 89명이었던 회원은 170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야당인 민주당의 마에하라(前原誠司) 전 대표를 비롯하여 79명의 민주당의 젊은 의원이 참가하고 있는데,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한 자민당과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없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 정치가들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북한이다. 2002년 9월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그동안 부인해왔던 일본인 납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에게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전해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북한을 일본 안보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지난 5년 5개월간의 고이즈미 정권은 납치문제와 핵·미사일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대화’와 ‘압력’의 병용이라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는데, 이것은 전후세대 정치가들이 보다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베 체제 하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수와 혁신간의 뚜렷한 이념적인 대립을 특징으로 했던 ‘55년 체제’ 하에서와는 달리 자민당 정권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중복되고 외교안보문제나 헌법 개정문제 등에 있어서 자민당과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 정책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II. 고이즈미 대북외교 막후 조정자로서의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체제 출범의 일등공신은 고이즈미 총리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7월 모리 총리에 의해 관방부장관에 임명된 아베는 2003년 9월 자민당 간사장에 임명될 때까지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도 관방부장관을 역임했다. 이때까지 정치가 아베는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는데, 그런 그의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를 급격하게 높여주었던 것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총리 취임 이전에 우정대신과 후생대신을 역임했던 자신과 달리 각료 경험이 없던 아베를 배려해서였는지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10월 아베를 관방장관에 임명했다. 관방장관은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보좌하여 중요정책의 기획입안, 종합조정 및 정보의 수집조사 등을 담당하는 내각관방의 실무책임자이다. 총리가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이라면 관방장관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안주인이라 할 수 있으며, 통상 관방장관이 총리와 거취를 같이 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관방장관 아베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정권의 외교안보정책은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정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5월 17일 첫 번째 소신표명연설에서 “미일동맹을 기초로 하여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의 근린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만, 미일관계를 제외하면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총리 자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중국과의 관계는 ‘정랭경열(政冷經熱)’ 혹은 ‘정랭경량(政冷經涼)’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지난 해 3월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한일 양국은 ‘각박한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2002년 9월 17일 열렸던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가지 점에서 대북외교는 성과가 있었다. 하나는 북일 국교정상화와 관련해 몇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북 외교에 있어서 최대현안이었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평양선언 제2항에서 일본 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으며, 그 대신 북한은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던 11차례의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일본이 주장했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즉, 양국은 식민지 시대에 발생한 양국의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후에 양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동안 일본이 북한에 대해 무상협력자금, 저리 장기차관 및 국제기관을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규모와 내용은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희생자 가운데 8명이 사망했으며 5명이 생존해있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으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공작선 침투문제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에게 직접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이것은 평양선언 제3항에서도 재확인되었다. 그 뒤 생존자 5명은 일본으로 귀국했지만 8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일본 내의 대북여론을 악화시켰다. 10월 말 재개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일본은 납치희생자 가족의 조기 귀국과 핵 및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2004년 5월 17일 두 번째 북일 정

상회담에서 김정일은 납치피해자 가족의 출국과 함께 일본 측이 제기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재조사도 약속했다. 그렇지만 그 뒤 북한 측이 일본에 전달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결과와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진위를 놓고 양국 간에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납치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이즈미 정권 하의 일본 정부 내에는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대립이 있었는데,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그 뒤에는 아베가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북한과의 비밀교섭과 예비교섭을 통해 첫 번째 방북을 성사시켰던 인물이 온건파의 대표격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었지만, 아베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2002년 9월의 정상회담 시 아베 관방부장관은 평양으로 가는 기내에서 평양선언의 내용을 처음으로 알았을 정도로 소외되어 있었지만, 첫 번째 정상회담 후 납치희생자 5명이 일시 귀국했을 때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위해 일단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다나카의 주장을 누르고 잔류시키면서 영향력을 높여갔다.

납치피해자 가족의 귀국문제가 난관에 봉착하고 2003년 1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던 것은 아베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5월에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재연되었다. 다나카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압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지만,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아베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자민당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외환법을 개정하여 북한에 대한 송금과 무역을 중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외무성과 재무성은 물론 자민당 수뇌부조차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03년 9월 아베가 관방부장관에서 자민당 간사장으로 발탁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아베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 설치된 납치문제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외환법의 개정과 납치희생자 가족의 조기 귀국을 추진했으며, 여론의 강한 지지를 배경으로 소극적이었던 공명당과 야당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2004년 2월 개정외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6월에는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출입을 막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이 성립한 데 이어, 중의원과 참의원에 납치문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능하게 만든 것도 아베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5월 22일 두 번째 북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다나카와 그를 지지했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월 28일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방북 의사와 준비를 지시받았을 뿐이다. 후쿠다는 5월 7일 자신을 포함한 각료들의 연금 미가입과 미납문제가 정치문제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방장관을 사임했는데,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제2차 방북을 둘러싼 고이즈미 총리와의 의견 대립이야말로 후쿠다가 고이즈미 총리와의 결별을 결정한 진정한 이유였다. 납치피해자가족모임과 이들을 지원하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나 의원연맹, 보수적인 언론들로부터 일본의 국익을 훼손하는 ‘친북외교관’이라고 비난받았던 다나카는 2005년 외무성 정기인사에서 동기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가 사무차관으로 승진하자 외무성을 떠났다. 야치는 2002년 10월 납치희생자 5명이 일시 귀국했을 때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다나카와 맞섰던 인물로 당시 관방부장관

보로서 아베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고이즈미 정권 말기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베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부각시켰던 것이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이었다. 거듭된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포동2호를 포함해 미사일 7발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대량파괴무기의 불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북일 간의 평양선언과 6자회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아베 관방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비롯한 대북제재조치를 즉각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일본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본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해 비군사적·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엔헌장 제7장의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7월 16일(현지시간 15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관련 계획과 발사시험의 중지, 6자회담으로의 무조건 복귀와 조속한 이행 등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일본 안에 대해 한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존재감을 어필하기에 충분했으며 아베 장관의 역할도 돋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이후 아베는 자신의 책임 하에 대책팀을 만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나 의도, 일본의 대응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게 했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대북제재조치는 대책팀이 마련한 9개항의 제재조치에 입각한 것이었다. 또한 아베는 미일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해 발사 당일 아침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를 총리관저로 불러 협의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006년 6월에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15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46%의 일본 국민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납치문제 이외에 북일 간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 주려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은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핵보유 선언을 했던 북한을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일본 정부의 대응을 주도했던 아베의 위기대처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III. 아베체제 출범 이후의 북일관계 전망

총리가 될 때까지 외교문제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었던 고이즈미 총리와 달리 아베는 1982년 부친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상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93년 중의원에 당선된 이후 자민당 정부조사회(政府調査会)의 외교부회(外交部會)에서 활동해왔으며, 강연회나 TV 출연을 통해 외교안보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피력해왔던 만큼 충분한 지식과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출판된 아베 장관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가 전체 7개의 장 가운데 사회복지문제와 교육문제를 다룬 마지막 두 개 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장이 정치외교안보문제에 할애되어 있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렇지만 아베 신 정권이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는 산적해있다. 우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조기에 정상화해야 한다. 고이즈미 총리가 남긴 부의 유산 중의 하나가 야스쿠니신사 참배인데, 이 문제는 더 이상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쿄재판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도쿄재판을 승낙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아베 장관은 총리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근 미 의회에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인사의 무덤에 헌화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일관계인데, 일본인 납치문제나 과거사 청산, 핵과 미사일 등의 안전보장문제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이것은 올해 2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정부 간 포괄협약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본 측은 ‘납치문제, 핵과 미사일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기본방침 하에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 및 용의자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한 데 반해, 북한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식민지 지배에 따른 과거사 청산문제의 우선적 협의를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 반환과 함께 탈북자를 지원한 일본인과 재일동포 등 7명의 인도를 요구했으며, 6자회담으로의 무조건 조기 복귀를 요구하는 일본 측에 대해서도 미국의 금융 제재 해제가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반발, 협의는 평행선을 긋고 끝났다.

이제 1주일 후면 전후세대 출신의 첫 번째 총리가 일본에서 탄생되지만, 북일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우선 북한은 유엔가맹국 중 유일하게 일본과 국교가 없는 나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북일 관계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 아베 장관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헌법 개정과 교육개혁이다. 아베는 현행 헌법은 점령시대 뉴딜러라고 불리는 진보적인 젊은 점령군 스태프들에 의해 10일 정도의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며,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및 교전권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는 독립국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일본에 부합하는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9조의 개정 혹은 삭제에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것은 전수방위나 집단적자위권의 불행사 등 전후 일본이 취해왔던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헌법 개정과 더불어 아베 장관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전후 일본사회에 전쟁과 패전의 원인이 국가주의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강해 국가적 견지에서 사고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일본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과거역사에 대한 일방적인 단죄와 자학사관의 극복을 주장하는 소위 ‘역사수정주의’나 전후세대 젊은 의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장관을 지지해온 전후세대 젊은 의원들은 조각 과정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평양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일본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일본이 취해온 일련의 대북 제재조치, 특히 공교롭게도 베이징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된 지 1년이 되는 9월 19일에 결정된 일본의 대북 금융제재조치에 대해 북한은 한층 더 비판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아베는 자신의 저서에서 경제제재조치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수단이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의 정권 핵심부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북한 내부에서 ‘화학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며, 미국에 의한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에 반발해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라는 강수를 두었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확대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북한의 또 다른 강경대응을 초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베체제 출범 이후 납치피해자가족모임과 이들을 지원하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와 같은 단체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일본에 밝힌 8명의 사망자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 교섭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치희생자 수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16명보다 훨씬 많아 46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미 납치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북한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력’을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다. 비록 일본의 대북 금융제재가 임기 만료를 앞둔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취해진 것이라 후임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고는 해도 북일 간의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1년 5월 고이즈미 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 소신표명연설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외교과제로 제시했던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堪忍袋の緒が切れる(칸닌부쿠로노 오가 기레루).’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일본 속담이다. 서로의 인내 주머니가 얼마나 큰지를 시험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 이상으로 9월 5일 나카소네 전 총리가 핵문제 연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주변 국가들에게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2006/09/18) **KNSI**

참고문헌

- 吉田裕, 『日本人の戦争観』(東京: 岩波書店, 2005).
 読売新聞政治部, 『政治を喧嘩した男 - 小泉外交の二〇〇〇日の真実』(東京: 新潮社, 2006).
 安倍晋三, 『美しい国へ』(東京: 文藝春秋, 2006).
 高崎宗司, 『検証 日朝交渉』(東京: 平凡社, 2004).
 山本一太, 『なぜいま安倍晋三なのか』(東京: リヨン社, 2006).

● 아베총리체제와 동아시아 FTA 추진 전망

(김양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 II. 아베 총리의 성향과 정책 기조
- III. 일본의 FTA 정책 기조
- IV. 아베총리체제이후 EPA 추진 전망
 - 1. 중국 견제를 위한 FTA 체결 가속화
 - 2. 국내 이해조정 곤란해 실현은 미지수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일본의 FTA 추진 정책이 아베총리체제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 그 변화의 동인은 무엇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총리의 교체라는 정치적 변수가 물고 올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 외교안보적 측면과 국내정치라는 두 측면에 주목해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하기로 하자. 즉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것의 향후를 전망하기로 하자.

첫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EU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무엇보다도 전쟁재발을 막겠다는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가깝게는 ASEAN의 출현에서 지역통합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어렵사리 발견할 수 있다. Schiff and Winter(1998)는 지역통합이 적대적인 인접국 간의 충돌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안보의 외부성(security externalities)’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우도 FTA는 비단 경제적 요인만이 아닌 복잡한 외교안보적 요인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아베 차기총리의 등장 이후 일본의 FTA 체결 향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일본의 EPA 추진 향방은 일본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기조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Putnam(1988)은 FTA와 같은 국제협상의 과정을 대외협상(level I)과 국내비준을 받기 위한 국내정치(level II)라는 두 단계 게임(two-level games)으로 설명한다. 이를 일본에 대비시켜 보면, 아베총리 이후의 일본 FTA 정책의 최종적인 향배는 FTA 정책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관료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주요 정책은 성청간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실행에 이르기 어렵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과연 자신과 관료 사이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물고 올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이하에서 아베의 성향과 정책기조를 살펴보는 한편 일본의 FTA 정책의 특성을 간략히 짚어보기로 하자.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아베총리 이후의 일본의 FTA 정책을 전망

해 보기로 하자.

II. 아베 총리의 성향과 정책 기조

아베 신조 그는 누구인가? 전후 베이비붐 세대(단카이세대)인 그는 올해 51세로 역대 총리 중 최연소 총리가 될 전망이다. 그의 부친은 아베 신타로이며, 외조부는 역대 총리 중 강경 우파에 속하는 기시 노부스케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스승은 아버지보다도 외조부라며 그에 대한 존경을 표해왔다. 북한의 요코타 메구미 납치사건 발생 당시 그는 북한에 대한 초강경입장을 고수해 대중적 지지기반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고 9월 18일 일본 단독의 대북 금융제재안을 각의에서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다. 이렇듯 그의 이념적 성향은 극우보수파이며 국내정책보다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는 어쩌면 북한의 메구미 납치사건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다. 만일 그가 대북 초강경 노선에서 물러서는 순간 현재의 지지기반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정책구상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역시나 외조부의 염원이었던 헌법개정이다. 또한 그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변국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신사참배 여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밝히지 않는 임시방편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그는 한국 및 중국과는 ‘정경 분리’ 원칙을 고수하겠으며 악화될대로 악화된 일중관계 개선을 위해 조기에 일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미동맹을 최우선가치로 내거는 정치가로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親美入亞’를 주장한다. 신임 총리의 공약집에는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도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아시아·태평양’ 혹은 ‘열린 아시아’가 차지하고 있다. 언제나 미국과 아시아를 말하면서도 미국에 방점을 찍는 미국의 시각에서 아시아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니 ‘親美’와 ‘入亞’는 애초부터 상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북강경노선 유지도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충돌할 여지가 크며 평화헌법의 개정은 일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결국 그는 ‘자유·민주주의·기본적인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중시한다고 함으로써 일본의 속내가 미국 및 인도, 호주 등 친미 국가와 연대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차기총리의 정책구상에서 FTA에 관한 언급은 많지 않다. 공약의 경제·재정 분야에서 아시아의 발전 가능성을 활용하는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나라들과의 FTA 체결 등을 통해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 지역의 공동체형성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다.

III. 일본의 FTA 정책 기조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FTA를 맺었다. 현재는 주로 ASEAN 전체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2003년 12월 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일본측의 낮은 농수산물 양허한 제시에 한국측이 반발해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현재까지 교착상태이다.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 역외국과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ASEAN 개별국과의 협상이 대략 일단락된 2006년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일본의 FTA 추진 현황(2006년 9월 현재)

단계	대 상 국
발효	싱가포르(2002. 11), 말레이시아(2006. 7), 멕시코(2005. 4)
체결	필리핀(2006. 9)
협상중(개시)	태국(2004. 2), 인도네시아(2005. 7), 브루나이(2006. 2), ASEAN(2005. 4), 칠레(2006. 2), GCC(2006. 7), 한국(2003. 10, 현재 중단)
공동연구	인도(2006. 5 완료, 2008년 체결 목표), 베트남(2006. 2 개시, 2007년 체결 목표), 호주(2005. 11. 개시), 스위스(2005. 10 개시)
장기검토	ASEAN+3(2007년부터 정부간 검토 개시), ASEAN+3+3(일본이 2008년 협상개시, 2010년 체결 제안), 이밖에 캐나다, 대만, EFTA, MERCOSUR, 이스라엘, 남아공 등이 FTA 제안 혹은 관심 표명

주: 굵은 글씨는 ASEAN 회원국을 표시

자료: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일본은 지난 8월 기존의 ‘동아시아(ASEAN+3) 경제장관회의’에 새로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을 추가한 ‘ASEAN+3+3’ 간에 처음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16개국의 비공식경제장관회의에서 이들 16개국간의 확대 동아시아FTA(EAFTA)를 제안하였다. 이는 일본이 2005년 처음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예정에도 없이 이들 3개국을 초청했을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는지 모른다. 일본은 이 자리에서 2008년 확대 EAFTA 협상을 개시해 2010년에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민간전문가회의를 2007년에 설치하자는 합의도 이끌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 시기에 개최된 ‘동아시아 경제장관회의’에서는 13개국만의 EAFTA 추진 로드맵이 제출되었으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미 일본의 관심이 확대 EAFTA로 옮겨감에 따라, EAFTA는 점차 동력을 잃어가는 듯 보였다.

일본의 확대 EAFTA 제안에 대해 한국과 중국 및 ASEAN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들은 아직 ASEAN+3의 로드맵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본이 실현 가능성도 낮은 제안을 해 온 이유가 역내 FTA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ASEAN+3의 틀을 형해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일본의 확대 EAFTA 제안은 중국이 1/3의 지분으로 참가하는 한중일 FTA은 물론 중국이 1/13로 참가하는 EAFTA도 불안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3개국을 추가로 포함하는 확대 EAFTA속에 중국을 1/16로 약체화시키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이 틀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중국견제에 매달리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스스로 내건 EPA의 목표가 무색하게도 지역적 정체성이 모호해 진 ‘확대 동아시아’ FTA를 주장하면서 경제대국으로서 역내에서 해야 할 리더십을 방기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을 통해 우리는 일본 FTA 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일본이 가장 중시하는 FTA 상대는 역내이며 특히 ASEAN이다. 일본의 ASEAN 중시전략은 북

합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지역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에게 ASEAN은 상호 긴밀한 분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자신의 앞마당과도 같다. 그런 전략적 거점지역에 중국이 먼저 FTA 체결을 제시하고 나오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그 결과 이 지역 전체와의 더딘 FTA 체결과 동시에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체결로 중국에 뒤쳐진 진도를 만회하고자 애쓰고 있다.

둘째, 일본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감안한 중간 수준의 FTA를 추진한다. 일본은 그간 체결한 FTA에서 공통적으로 농수산물 시장을 공산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¹⁾. 이는 일본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든가 미국이나 EU와 달리 농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이들 나라와의 FTA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은 농수산업 약체국인 한국과의 FTA조차 내부 반발에 직면한 나라다. 그렇다면 기존의 FTA에서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소했을까?

세 번째 특성이 이를 설명해 준다. 일본은 자국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을 소폭으로 하는 대신, 상대국의 지재권과 투자규범 강화를 전제로 상대국이 원하는 일본기업의 기술이전과 투자 유치 등의 협력으로 만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측 모두 ‘높은 수준의 FTA’라는 명분보다는 서로 체결 가능하고 나름대로 서로를 만족시키는 실리를 쟁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지역전략수단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외교전략상 일본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 즉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FTA보다 「經濟連携協定(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²⁾. EPA가 ‘상품무역의 자유화(협정의 FTA)’에 더해 주로 역내국과의 포괄적인 경제연계를 통해 역내 경제통합의 기반 형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FTA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IV. 아베총리체제이후 EPA 추진 전망

1. 중국견제를 위한 FTA 체결 가속화

누차 강조하거니와 일본의 FTA는 경제통상수단이 아닌 복합적인 대외전략수단이기 때문에 그 향배를 점치는데 있어 현재 동북아의 외교안보지형 그리고 일본 국내의 정치지형과 분리해 사고하기 어렵다. 아베총리는 일미동맹 중시, 중국견제, 주변국과의 정경분리를 내세우고 있어 그가 등장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의 FTA 정책의 기초는 크게 바뀌지 않거나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즉, 일본은 자국의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FTA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다각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자신의 막강한 경쟁력을 배후로 ASEAN 개별국과 hub-spoke 방식의 FTA 체결을 가속화해 중

- 1) 일본과 각 국의 FTA에서 상품 전반 및 농수산품의 양허 결과에 대한 개요는 김양희(2006) 참조
- 2) 본래 EPA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EU로서, 2000년 이후 구식민지의 개발 촉진과 이들 사이에 체결된 경제통합체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맺은 협정을 EPA로 칭하였다. EU가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지역(ACP)의 구식민지국가들과 맺은 코토누(Cotonou) 협정이 대표적이다.

국과 한국에 뒤쳐진 진도를 만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확대 EAFTA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이들과의 경제협력 증대 등 연대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베 총리는 중국이 1/16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확대 EAFTA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국내적 입지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이 동아시아든 미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이든 개의치 않을 것이다.

셋째, 따라서 아베총리 체제하에서 일중 FTA나 한중일 FTA는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베 총리는 관방장관 당시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는 지재권 강화 등 중국측의 WTO의 규범 준수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NIKKEI 2월 20일자). 단, 점차 심화되어 가는 양국 경제간 상호 의존도 증대를 무시할 수 없는 일본으로서는 ‘경경분리’ 원칙에 따라 양국간 혹은 한중일 투자협정(BIT)을 제안하거나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지속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넷째,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일 FTA 협상재개다. 만일 내년 경부터 한중 FTA 논의가 진전된다면 아베 이후의 일본은 한일 FTA 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애초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중국견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내 이해조정이 뒤따라 줄지는 미지수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중국견제를 위해 시작된 한일 FTA 논의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미 FTA 논의가 급진전될 경우에는 일본내에서 일미 FTA 체결에 대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아베의 정치적 성향을 감안할 때 그는 일미 FTA의 외교안보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또한 관세수준이 낮고 농업과 서비스업 경쟁력이 높은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실익과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이를 위한 내부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³⁾.

2. 국내 이해조정 곤란해 실현은 미지수

일본 국내에서는 FTA 체결을 적극 주장하는 외무성이나 경제산업성에 비해 농림수산성 등 여타 성은 소극적이어서 성정간 이해조정이 곤란하다. 의회내에서도 각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族議員(농수족, 건설족, 우정족 등)’의 기득권을 깨트리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단적으로, 경제산업성이 처음 확대 EAFTA 구상을 발표했을 때 농림수산성 장관은 농업대국인 호주가 포함되는데도 농림수산성과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이해갈등요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잠복되어 있을 뿐이다.

Putnam(1988)이 지적하듯, 아베 총리가 FTA의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든, 실제 FTA가 성사되기까지는

3)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한 일미 공동 심포지움 이후 비공식 석상에서 일본측이 미국측(관료 및 AEI, IIE 연구자)에 한일 FTA 협상이 진행중인데 한국 다음 상대로 일본과 시작할 가능성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측 인사는 한미 FTA는 정치적 목적이 크며, 농업시장 개방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뿌리 깊은 일본과의 FTA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일본경제연구센터회보 2006. 7).

대외적 변수 못지않게 그가 최대현안인 농업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 조정 및 의회내 족의원 의 기득권 타파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아베 신임총리는 농림수산업, 건설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바꿔놓겠다는 공약에 비교역재 업종의 체질강화와 그를 바탕으로 한 개방 가속화를 합축시켰다. 그러나 이에 관한 아베총리의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사히(2006년 8월 2일자), 요미우리(2006년 8월 25일자)를 위시한 일본내 여론은 일본의 확대 EAFTA 제안이 중국견제용임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나 일본이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V. 나오는 말

아베 신임총재는 선출즉시 한국과 중국에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그의 성향을 보건대 고이즈미 전 총리 만큼 주변국과 낯선 대립각을 세우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강경노선을 바꾸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하진 않으리라는 점 또한 예상된다. 결국 주변국과의 갈등 요인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자신이 적극 제안한 애초의 EAFTA 구상을 확대 EAFTA로 바꿔놓는 악수를 돕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복잡하게 얽힌 국내의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난관도 가로놓여 있으나 이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종합해 보자면 앞으로 일본이 의도대로 확대 EAFTA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일본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일본의 몫이다. 다만, 아베 신임총재는 그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나라 일본(美しい国 `日本`)'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첫째, 한·중·일간의 관계회복, 특히 일·중간 회복이 없이는 일본이 바라는 확대 EAFTA도 결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각국은 더 이상 유약한 나라들이 아니며 미국은 영원한 슈퍼파워일 수 없다. 늘 아시아를 미국 뒷전에 두는 일본의 전략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그러다 언젠가 세계경제의 동력이 된 아시아에서 소외되고 아무리 발버둥쳐야 태평양 건너의 NAFTA나 FTAA에 속할 수 없는 일본은 쇠락하는 미국과도 자연 소원해지는 결과를 자초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필자만의 기우일까. 진정 ‘아름다운 나라 일본’과 이웃하길 소망한다. 한다.(2006/09/21) **KNSI**

● 아베체제의 등장과 중일관계 : 쟁점과 전망

(윤영덕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시간강사)

I. 동아시아에서 중일관계의 의의

II. 중일관계의 현황: 정랭경열(政冷經熱)

III. 중일관계의 쟁점

IV. 중일관계의 전망

I. 동아시아에서 중일관계의 의의

9월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경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베체제의 등장 이후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1년 일본 총리로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를 계기로 경색된 중일관계가 일본의 새 내각 출범으로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양대 강국으로서 지역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전통적인 화이질서(華夷秩序)나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추진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지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던 중국과 일본의 야망이 드러난 역사적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는 중국 내부의 무기력과 서구의 충격에 의해 붕괴되었으며, 일본이 추진했던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에 엄청난 전쟁의 참화를 남기면서 일본의 패전과 함께 몰락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질서가 형성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질서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양대 진영간 대립이라는 세계질서의 기본 구도에 종속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런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초래된 냉전의 해체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실상 냉전시기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해 왔던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중국과 일본이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양국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국력을 증강시키면서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급속히 강화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비록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여전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보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는 강대국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정치·군사적 강대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封永平, 2005: 38) 이와 같이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중일 양국의 강대국화 전략 추진으로 양국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양대 강국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구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金熙德, 2005: 39) 동아시아 지역에서 탈냉전 이후 냉전시기의 지역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아직까지 완결적인 자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역질서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일 양국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II. 중일관계의 현황: 정랭경열(政冷經熱)

1972년 공식 수교를 통해 양국관계를 정상화한 중국과 일본은 냉전시기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팽창이라는 공동의 위협요인에 대처하면서 일종의 “밀월시기”를 맞이했다. 중일 양국은 1978년에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각 분야의 관계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1985년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대만 문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일본의 대중국 경제 제재 참여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조건에서 1992년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였던 장쩌민(江澤民)의 방일과 일본 천황부부의 방중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양국간에 역사인식 문제, 대만문제, 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을 둘러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에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함께 양국이 “평화와 발전에 주력하는 우호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21세기 들어 양국관계는 1972년 관계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01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양국 정상간의 상호방문이 중단되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관계의 경색은 표면적으로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중국 국무원 부총리인 우이(吳儀)가 일본 방문 기간 중에 예정되어 있던 고이즈미와의 회견을 취소하고 귀국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2000년부터 매년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열렸던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도 무산되면서 중일관계와 한일관계의 악화가 모처럼 무르익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일관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경분리”로 위와 같이 양국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경제교류는 지속되어 복잡한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성철, 2004: 138) 이른바 “정랭경열”(政冷經熱)로 표현되는 중일관계의 최근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예컨대, 양국 정상간 회담이 장기간 중단되는 정치적 경색국면의 상황에서도 중일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비록 2004년도를 기점으로 대중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중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이고 홍콩을 제외한 제2의 해외직접투자국이다. 또한 중국은 2004년도에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중일간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연 도	1978	2001	2002	2003	2004	2005
교역총액	10.4	877.5	1019.1	1335.8	1678.9	1845.0

자료 출처: 劉愛軍(2005: 25); 中國國家統計局(2006); 高連福(2002: 138).

그렇지만 경색된 정치적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의 “열기”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일본 중국대사인 왕이(王毅)의 말처럼 중일관계의 “최대 특징인 정랭경열이라는 비정상적 현상”이 지속된다면 “경제의 열기도 식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中國新聞週刊, 2005년 1월 12일) 이러한 우려는 최근 들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정부의 대중국 엔화 차관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 교역에서 1993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일본의 지위도 2004년도에 미국과 EU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심지어 2004년도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한국보다 작았다.(劉愛軍, 2005: 22)

III. 중일관계의 쟁점

1990년대 이후 표면화되기 시작한 중일 양국의 갈등이 21세기 들어 정치와 안보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이어지게 된 요인으로는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인식 문제와 대만문제, 조어도와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등이 거론된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온 고이즈미 총리의 고집스러운 행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인식의 문제는 중일관계의 수면에 떠오른 빙산의 일각으로서 양국의 정치·안보적 관계가 냉각된 표면적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일 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안보이익을 핵심으로 한 중일 양국의 전략적 이익의 충돌이 빚어내고 있는 안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封永平, 2005: 35-40) 다시 말해 중일 양국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불확실성이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에서 기인한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일 양국간에는 서로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일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위협론”과 중국에 확산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력의 현대화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군사비에 대해서 극도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침략전쟁의 사실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평화헌법의 제약을 뛰어 넘어 군국주의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의 시행 이후 연평균 9.4%에 달하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일약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반면, 상대적으로 1990년대를 “상실의 시대”로 보내야 했던 일본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신감 약화가 “중국위협론”에 확신을 더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중국이 경제적인 우위를 확보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1990년대 일본경제의 침체와 대비되면서 보다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杜浩, 2004: 127-128) 이렇듯 중국의 부상에 대한 초조감이 팽

배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2004년 12월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신방위계획대강”에 최초로 “중국위협론”을 수록하였다.(馮昭奎, 2005: 8) 이에 반해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확고히 믿고 있으며, 침략전쟁 부인과 역사 왜곡 및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도 결국은 “신군국주의”의 부활과 연관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상대방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양국관계가 여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리적 인 인접성과 과거 역사에서 쌓인 감정, 그리고 양국 모두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지역 강대국이라는 것 등의 요인들이 양국의 민심에서 특수한 함의와 비중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李文, 2005: 21) 이러한 이유로 중일간의 상호불신으로 초래된 양국관계의 악화는 양국의 여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수우경화의 가속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반감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총리실의 일본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2000년 들어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劉愛軍, 2005: 23) 이와 함께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 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2005년 8월에 베이징대학(北京大學)과 일본의 민간기구인 “언론 NPO”, 그리고 중국일보사(中國日報社)가 공동 주최한 “베이징-도쿄 포럼”에서 중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은 ‘매우 좋지 않다’와 ‘별로 좋지 않다’가 6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HU.COM, 2005)

이처럼 중일 양국의 정치·안보적 관계가 경색국면을 돌파하고 있지 못한 것은 단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인식 문제와 일본 국내의 보수우경화 및 강경한 대중국 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 중일 양국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깊은 상호불신의 골을 메우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부침(浮沈)이 반복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IV. 중일관계의 전망

아베 신조는 지난 9월 1일 히로시마에서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21세기 일본의 국가 상에 걸맞은 헌법 제정”을 첫째 공약으로 제시하고 5년 이내 개헌을 약속했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는 “죽대 있는 외교”와 “강한 일본,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을 기치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적 아시아외교”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아베의 경선 출마 공약에서 제시된 외교 분야의 내용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전략 대화 추진과 국가안보회의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악화된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 개선 및 상호협력 추진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아베의 자민당 총재 경선 출마에서 제시된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고이즈미가 추구해 온 노선과 일맥 상통한다.(人民網, 2006년 9월 2일)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와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베가 무엇보다도 미일안보협력의 강화를 역설한 것은 미일동맹이라는 틀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신의 자주권과 주도권을 모색하고 확대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는 방법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강대국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李文, 2005: 18) 따라서 경제대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영향력 확보를 지향해 온 일본의 강대국화 외교노선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가 중국·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중단된 정상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으로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경색시킨 고이즈미 외교의 부정적 유산을 털어버리고 가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중일관계를 경색시킨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일본 지도부의 완고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정치적 장애”를 일본 지도부가 조기에 “철저히 해소”하고 “언행일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中國外交部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06년 9월 16일; 2006년 9월 20일) 더군다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략적 아시아외교”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일본·호주·인도와의 전략 대화 추진을 내세우는 것이 대중국 견제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에 대한 입장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일본 외교가 여전히 아시아를 경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탈냉전 이후 일본은 대중국 외교에서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입장과 정경분리와 견제균형이라는 외교 원칙을 견지해 왔다.(김성철, 2004: 137) 또한 일본은 이제까지 국내적 제약과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지도적 역할 수행을 자제해 왔고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탈냉전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경제적 초강대국의 지위를 기반으로 정치·안보분야에서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김용신, 2002: 278) 중국도 21세기 들어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역 강대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지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지역협력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유럽과 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이 지역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불신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서로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만 인식한다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강한 일본”이 충돌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향후 중일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일본의 정치·군사적 강대국화를 어떻게 볼 것이며, 일본의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양국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중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갈등요인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 완전히 해소되기 힘들다. 우선적으로는 일본 지도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가 중일관계에서 정치적 경색국면을 타개할 선차적 과제가 될 것이지만 이 또한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는 중일 양국 정상간의 상호방문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골 깊은 상호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할 지난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중화제국의 시기와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야망의 시기, 미국의 제국적 질서가 유지되던 냉전시기를 뛰어 넘어 탈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주도권 확보가 아닌 동아시아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백영서, 2005: 10-34) 이것이 결국 중일 양국이 상생하고 동아시아가 함께 부흥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2006/09/25) **KNSI**

참고문헌

- 김성철. 2004,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미일동맹과 동북아외교”, 이승철 외,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나남출판.
- 김용신. 2002, “일본의 외교전통과 대북한·동북아 정책”, 강태훈 외,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국제관계』, 서울: 도서출판 오름.
- 백영서. 2005,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공동체로”,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과주: 창비.
- 高連福. 2002, 『東北亞國家對外戰略』,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金熙德. 2005, “中日關係: 轉折期的特點和展望”, 『日本研究』, 2005年 第2期.
- 杜浩. 2004, 『冷戰後中日安全關係』,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封永平. 2005, “大國崛起的安全困境與中日關係”, 『現代國際關係』, 2005年 第12期.
- 劉愛軍. 2005, “論當前中日關係及突破僵局的對策”, 『荷澤學院學報』, 第27卷 第6期.
- 李文. 2005, “中國的穩定發展與中日關係”, 『當代亞太』, 2005年 第7期.
- 中國國家統計局. 2006, 『中華人民共和國2005年國民經濟和社會發展統計公報』(2006年 2月 28日).
- 馮昭奎. 2005, “中日關係走到十字路口”, 『日本研究』, 2005年 第1期.
- 中國新聞週刊. 2005년 1월 12일자.
- 人民網. 2006, <http://japan.people.com.cn/GB/35469/35472/4772961.html>(검색일자: 2006년 9월 10일)
- SOHU.COM. 2005, <http://news.sohu.com/20050824/n226764466.shtml>(검색일자: 2006년 9월 10일)

● 아베총리체제의 개헌구상과 일본 안보정책 전망

(조양현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I. 일본 외교안보 이념구도 상의 아베 정권의 위치
- II.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변천
- III. 아베 개헌구상의 논리와 전망
- IV.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의 함의

21세기 들어 일본에서는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의 국가진로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향배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만큼, 주변국에서도 주목하여 왔다. 그러던 차에 최근 출범한 아베 정권은 개헌을 정권 구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 이 문제가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예비적 고찰로서 전후 일본 외교안보 이념구도 상의 아베 정권의 위치와 그 이념성향 그리고 정책노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평화헌법 체제 하의 안보정책의 변천과 아베의 개헌 구상 및 그 전망을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개헌 논의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가지는 함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I. 일본 외교안보 이념구도 상의 아베 정권의 위치

가. 냉전기 통상국가론의 정착

냉전기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은 1947년 제정된 평화헌법과 1951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1960년 개정)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미국주도의 전후 국제질서에 복귀한 일본이 택한 외교안보노선은 헌법 제9조를 전제로 한 미일안보조약의 체결이었다. 당시 일본의 정치·외교를 담당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방위비 등의 안전보장 코스트를 최대한 경감함으로써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의 부흥과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우선하였다. 이러한 ‘輕무장 경제우선 전략’ 즉 통상국가론(이른바 요시다 노선)은 그 후의 ‘55년 체제’ 확립과 자민당 장기집권기를 통하여 미소대립의 냉전체제 하의 일본 대외정책의 중심축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냉전 이후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보통국가론의 침투

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의 국내외 환경은 급변했다. 대외적으로는 냉전의 종식과 걸프전의 발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북한 위협론) 그리고 대만해협 위기와 중국경제의 부상(중국 위협론), 국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약체화, 사회당 등의 혁신정당의 몰락,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불황, 천재지변과 대형 사건사고에 따른 사회불안과 위기의식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회는 보수화의 경향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국가전략의 모색이 본격화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90년의 걸프전을 거치면서 일본이 소극적인 안보노선을 탈피하여 국제평화에 보다 적극적인 공헌을 해야한다는 미국의 압력이 거세졌고, 일본 내에서도 정계, 재계 및 언론계를 중심으로 ‘경제대국’의 지위에 어울리는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요구하는 주장이 분출되었다. 이른바 보통국가론으로 알려진 이들의 주장은 미일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한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군사력의 보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의 개헌 요구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내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보통국가론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특히 2001년 등장한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로 자리잡았으며, 그 주장의 많은 부분이 실현되었다. 즉 개헌 논의의 본격화(국회 내의 헌법조사회 설치와 그 최종 보고서의 제출,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 발표), 국민통합 장치의 법제화(교육기본법 개정의 움직임, 국기·국가법, 통신방수법, 주민 기본대장법 제정), 국가위기관리 태세의 강화(유사관련법안 제정, 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의 각의 결정) 및 국제공헌의 강화(특별조치법 제정에 의한 자위대의 해외파견, 유엔 안보리상임위 진출 시도) 등이 그 예이다.

다. 아베 정권의 이념 성향 및 정책 노선

아베신조(安倍晋三) 신임 수상은 친미보수(親美保守)의 성향이 강하며, 이러한 이념성향이 차기 정권의 정책 전반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베 내각의 인적 구성을 보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적인 요소와 더불어, 아베의 이념성향에 가까운 보수계 인사와 측근이 주요 각료 내지는 수상관저 보좌관으로 적극 기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보수색이 강한 정책노선을 추구할 것을 예상케 하며, 따라서 아베 정권의 정책노선은 기본적으로 보통국가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세대 출신으로서 첫 총리인 아베는 자신의 정권 창출을 ‘戰後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범(戦後レジームからの新たな船出)’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보수세력에게 있어서 전후체제란 패전 후 연합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며, 이의 총체적인 상징이 바로 평화헌법이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航海는 이러한 전후체제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국민들 스스로가 일본인인 것을 비하하지 않고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의 기초를 일본 ‘스스로가 세우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항해에서 海圖가 되는 것은 일본의 역사, 전통, 문화 등인 바, 그 목적지인 ‘아름다운 나라’는 결국 전통적 요소에 기초한 국가이다. 이처럼 아베의 정치이념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복고주의적인 색채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보통국가화 정책이 보수주의적 이념의 제도화를 통한 국가체제의 정비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실제로 아베의 정권구상은 고이즈미 구조개혁 노선을

부분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개헌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개혁, 대외적으로는 미일동맹의 재편·강화, 자위대의 항구적인 해외 파견과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 ‘강한 일본’의 건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또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그 기본 목표를 “주장하는 외교에 의한 ‘강한 일본, 신뢰받는 일본’”으로 설정하여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래의 수동적이고 조용한 외교행태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필요할 경우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주장의 내용 자체는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주장하는 외교’의 추진에 있어서는 상대국별·현안별 개별적 접근법과 선택과 집종의 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아베 정권 하에서는 야스쿠니와 같은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 대한 신중한 대처, 한국·중국과의 관계개선의 기회주의적 모색, 미일동맹 강화와 개헌의 적극적 추진, 북한문제에 대한 강경노선의 견지 등이 예상된다.

II.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변천

가. 냉전기 전수방위 개념의 정착

평화헌법 개정 논의는 대개의 경우 안보정책, 특히 전수방위, 집단적 자위권 등의 개념과 관련된다. 따라서 아베 정권의 개헌 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평화체제 하의 안보정책의 흐름과 논점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 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예비적 고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냉전기 일본 안보정책의 특징은 최소한의 방위력 보유와 소극적 방위를 특징으로 한 전수방위(專守防衛)라는 개념으로 대표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력(戰力) 보유의 포기 및 교전권의 부인(제9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히 해석하자면 일체의 전력 보유와 무력 사용은 위헌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의 자체 방위를 위한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어 1952년 보안대(保安隊)로 개조된다. 당시 요시다 내각은 헌법에서 말하는 ‘전력’이란 근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와 편성을 갖춘 것을 뜻하므로 보안대는 전력이 아니며, 이것을 침략으로부터의 방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후 1954년 자위대와 방위청이 발족하여 실질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기에 이른다. 1957년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 내의 방위력의 정비와 미일안보체제에 의한 외부침략에의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의 기본방침이 각의결정된다. 1970년에는 최초의 방위백서가 발표되어 전수방위의 입장이 천명된다. 이에 따르면, 재래식 무기에 의한 소규모의 직접 침략과 간접침략에 대해서는 일본 자력으로 방위하고, 핵을 포함한 대규모의 전면전은 미일안보체제에 의존한다고 되어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미일동맹 하의 양국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기에 이른다. 즉 미국의 대일 방위분담 증대 요구와 국제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1976년 일본의 방위력 정비계획을 담은 방위계획대강이 각의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의 제한적인 공격에 대하여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대규모

외부 공격시에는 미국에 의존하며, 이를 위해서 일본은 최소한의 ‘기반적 방위력’을 가지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수방위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기반적 방위력이란 개념으로 일본의 역할을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군과 자위대간의 협력사항을 문서화한 것이 1978년에 확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이다.

1980년대 초에는 종합안전보장이란 개념이 도입된다. 즉 안전보장의 범위를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 외에 자유로운 국제질서, 에너지, 식량의 확보 및 자연재해에의 대비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군사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비군사적 요소, 즉 외교, 경제, 에너지, 식량, 방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력 보유의 제약을 받는 일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전수방위 개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이후의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요소로 정착한다.

이처럼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이라는 틀 속에서 기반적 방위력과 종합안전보장의 개념을 기본으로 한 전수방위 원칙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 안보정책의 중심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했다.

나. 냉전 이후 적극방위의 모색과 미일동맹의 강화·재편

1990년대 들어서 일본 안보정책에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었는데, 이는 적극방위의 형태로 나타났다. 즉 본토 방위에 국한되던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주변지역의 유사사태에의 대응까지 확대되고, 자위대의 해외과전의 길이 열린 것이다. 1995년 발표된 신방위계획대강은 종래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과 미일동맹 체제를 견지하면서, 냉전 이후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을 재설정하였다. 즉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자위대의 대처를 주도하고 미군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의 작전개념의 전환, 자위대의 임무에 자연재해나 지역 위기상황에의 대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참가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일동맹 역시 다시 정의되었다. 1996년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은 미일동맹이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과 번영 유지의 근간임을 확인하고, 미일동맹의 대응범위를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동맹의 광역화’에 따라 미일간의 구체적인 협력강화 방안을 규정한 것이 1997년에 확정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이고, 이를 근거로 일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이다. 주변사태법은 주변지역 유사사태 발생시의 자위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주변지역의 범위를 상황적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꾀하였다.

21세기 들어 일본의 방위정책은 한 단계 더 진화한다. 2001년 9·11 테러는 미일간의 위협인식 공유에 바탕을 둔 적극방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글로벌 차원의 테러리즘과 대량 파괴무기(WMD), 동아시아의 북한이 새로운 위협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반영한 2004년판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방위와 더불어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을 방위정책의 기본 목표로 추가하였고, 본토에 대한 전면 침공에 대비한 냉전형 방위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기능 탄력적 방위태세로의 전환을 꾀하였다. 이렇게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이란 목표가 추가된 것은 자위대의 임무를 일본 방위 및 주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무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이즈미 정권은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유사법제, 이라크지원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미일관계를 공고히 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의 새로운 군사·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지구적 방위태세 검토(Global Posture Review) 즉 해외주둔 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국의 글로벌 방위전략에 맞추어 미일동맹의 재편·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 특징은 동맹의 지역화·글로벌화, 일체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냉전기의 미일동맹이 일본 방위와 주변 유사시 일본의 기지 제공이 중심이었다면, 1990년대 후반에는 주변사태에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방위 차원으로, 최근에는 글로벌 차원의 안보환경 개선 협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의 미일동맹의 재편에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향상, 지휘·통제를 위한 사령부간 연계성 향상, 기지·시설의 공동사용, 정보공유·협력강화, 합동훈련 강화 등 동맹의 일체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베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아베는 “핵억지력과 극동지역의 안정을 생각한다면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결하며, 미국의 국제사회에의 영향력, 경제력 그리고 최강의 군사력을 고려한다면 미일동맹은 최선의 선택” 이라고 하여, 미일동맹의 재편·강화에 관한 한 고이즈미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후 일본 안보정책은, 일본 방위에 한정했던 1976년 방위계획대강, 지역방위로의 확장을 시도한 1995년 대강, 그리고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역할을 목표로 하는 2004년 대강을 거치면서 일본의 방위력 증대와 역할 강화 및 동맹의 재정의를 통한 미일동맹의 재편·강화를 추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역할이 주변지역 그리고 국제무대로 확장되고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되면서 사실상의 적극방위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냉전기 안보정책의 근본이었던 전수방위 원칙이 냉전 이후 형해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II. 아베 개헌구상의 논리와 전망

가. 전후체제와의 결별

일본에서의 개헌 요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현실성 있는 논의로 구체화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2000년 1월 일본 국회 내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어 2005년 4월 그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데 이어, 2005년 11월 자민당은 헌법 개정안 초안(‘신헌법 초안’)을 발표하고 개헌에 필요한 국민투표법안 제정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후 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의원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헌법 제9조의 개정에 70% 가까이가 찬성을 보였는데, 이는 일본에서 개헌 논의가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아베 정권은 개헌을 정권구상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평화헌법 개정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국가화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전후체제의 상징으로서의 평화헌법에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 (아베와 같은 자민당 보수 정치가들은 ‘개정’ 이란 말보다 ‘제정’ 이란 말을 선호하는데, 이는 점령정책에 의해 강요된 평화헌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일본의 헌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함으로써 참다운 국가기반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아베에 의하면 55년 체제로의 보수세력 결집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당의 약진에 대한 경계심 외에, 경제회복의 긴급성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전자는 고도성장에 의해 훌륭하게 달성되었지만, 후자를 대표하는 ‘자주헌법의 제정’ 은 아직도 달성이 요원하며, 그 결과 가족의 유대, 지역에 대한 애착,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등의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가치관이 경시되는 폐해를 낳았다고 한다. 따라서 전후체제를 상징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정한 것은 보수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실제로 아베는 상기의 자민당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 前文을 일본의 전통,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 정권이 개헌과 더불어 중점 추진 목표로 삼는 ‘교육개혁’ 역시 보통국가화를 위한 이념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베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속심의’ 상태에 있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평화헌법이 실시되기 직전인 1947년 3월 말에 시행되었으며, 인간존중, 진리와 평화의 회구, 인격의 완성 등 평화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념을 선언하여 흔히 ‘교육헌법’ 내지는 ‘교육헌장’ 으로 불린다. 일본 보수세력은 교육기본법이 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어 황국사상과 유교사상에 기초한 戰前의 ‘교육칙어’ (1890년 공포)를 대체하였다는 인식 하에, 평화헌법 개정과 더불어 교육기본법 개정을 일본의 근본에 관계되는 중요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의 성립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아베가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기 성립에 의욕적인 것은 ‘가족과 지역, 국가를 중시하는 교육’ 을 실현하겠다는 보수 논리의 요구와 합치되는 것이다.

나.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둘째, 평화헌법 개정은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통국가화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력 보유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전수방위라는 개념으로 자위대 운용의 길을 열었고, 또 냉전 이후 전수방위 개념의 많은 부분이 형해화하기는 하였지만, 평화헌법은 아직도 일본이 완전한 보통국가로서 행동하는 데 족쇄가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집단적 자위권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평화헌법 제9조 1항은 전쟁의 포기, 동 2항은 전력 보유의 포기 및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전수방위에 의거한 무력 사용 즉 개별적 자위권 행사도 결국은 무력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헌법 해석(이른바 해석 개헌)을 통하여 자위대(‘전력을 갖지 않은 군대’)의 보유와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의 무력 사용(개별적 자위권의 행사)을 가능케 했다. 즉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국가인 일본은 당연히 고유의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분리하여, 전자와 관련하여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 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인정하는 반면, 후자

는 방어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그 권리는 갖고 있으나 헌법의 규정상 그 사용은 불가능하다는(즉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1981년 5월 내각 법제국이 준비한 일본 정부 답변서).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의 부정은 미일동맹의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는 동맹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침략의 저지에 필요한 행동에 나서는 것(집단적 자위권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권리의 사용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위헌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미국과의 쌍무적이고 평등한 동맹관계의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다. 즉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의 군사력이 개입하지만,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은 군사적 수단에 의해 미국을 도울 수 없는 것이다.

‘같이 땀을 흘리는’ 동맹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미일 간 군사협력 체제 강화 및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도 정비를 통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아베로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부인하는 현행의 헌법 해석에 불만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베는 미일동맹의 쌍무적 관계화에 의한 신뢰성 확보, 다국간 공동훈련, 주변사태 발생시의 지원활동 원활화 등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들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2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명시한 헌법으로의 개정(명문 개헌)을 추진하되, 그때까지의 잠정 조치로서 현행의 헌법 해석의 변경(해석 개헌)을 통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명문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는 평화헌법 제9조의 수정에 집중된다. 상기의 자민당 헌법 개정안은 평화헌법 제9조 1항은 유지하고, 동 2항만을 수정하여 전력 즉 ‘자위군’의 보유를 명시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조문의 해석과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베의 개헌 구상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명시하는 쪽으로 헌법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개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그 개정 범위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사민당과 공산당은 물론, 당 차원의 ‘헌법提要’를 제시한 민주당, 그리고 여당인 공명당과 자민당 내에서조차 다양한 의견이 혼재한다. 따라서 이들을 아베 노선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조정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제정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며, 여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헌의 발의에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 역시 큰 제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아베는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헌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향후 아베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자민당 총재의 임기(현재 3년, 3선 불가)를 고려한다면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작아 보인다. 물론 개헌을 위한 사전 작업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내년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한 내년 가을 이후에야 국민투표법 제정 및 헌법안 절충 등의 작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석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베는 두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양적 개념’으로서의 집단적 자위권의 추구이다.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다’는 이유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의 정부 해석은, 뒤집어 보면 ‘필

요 최소한도의 범위' 이내라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려는 것이다. 즉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절대 개념' 이 아닌 '양적 개념' 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헌법은 교전권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정부 해석에 의하면 자위권의 발동에는 (1)일본에 대한 급박부정(急迫不正)의 침해가 존재하며, (2)그 외의 적당한 수단이 없고, (3)필요 최소한도의 실행행사에 국한한다 라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즉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둘째, 집단적 자위권을 '중핵 개념' 과 '외적 개념' 으로 나누어, '외적 개념' 에 한하여 그 행사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구 반대쪽까지 가서 미국과 함께 싸우는 경우(중핵 개념에 해당)와 공해 상에서 미군선박이 공격받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가 돕는 경우(외적 개념에 해당)는 상황이 다르므로, 후자와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 역시 자의적이고 애매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이러한 방법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어쨌든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예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소극적인 내각 법제국 뿐만 아니라 이에 적극적인 외무성, 방위청 등의 담당자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을 설치하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의 경우에 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해석 변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진정한 미일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공공연히 촉구한 최초의 사례는 2000년 12월의 '아미티지 보고서' 로, 이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는 미일 간 동맹협력의 제약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 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촉구하는 발언을 반복했을 뿐 만 아니라, 일본이 바라다면 개헌도 시야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냉전 이후 지역안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안보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원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 내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본격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아베는 또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위대의 해외 파견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인 동시에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국익에도 합치된다는 인식 하에, 기존의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의 연장 시행과 더불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은 1992년 PKO 협력법에 의거하여 PKO 활동에 참가한 이래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확대해 오고 있는데, 아베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제한 투성이의 행동기준' 에 따라야만 하는 현실을 개헌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IV. 한반도·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의 함의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노선은 보통국가론으로 위치지을 수 있으며, 평화헌법 개정 논의는 기본적으로 보통국가화를 향한 국가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아베에게 있어 개헌은 전후체제와의 결별의 상징

이자 자위대의 군대화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한 보통국가화의 제도적 완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자면, 개헌은 일미동맹의 강화·재편 및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그리고 ‘강한 일본’을 향한 ‘주장하는 외교’를 추구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냉전 이후의 국제환경, 지역정세 그리고 일본의 국내 상황이라는 복합적 요인 하에서 일본 스스로가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현재 진행형의 현상으로, 이미 상당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평화헌법 개정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으로 아베의 개헌 구상이 수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지만, 이러한 방향성의 추구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내지는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먼저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선이 보수주의적 이념의 제도화에 경사되고 이러한 제도가 다시 보수 이념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경우 동아시아에서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횡행하고, 결과적으로 역사인식, 영토문제 등을 둘러싼 국가 간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자위대의 군대화 및 집단적 자위권의 추구는 일본 안보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바, 이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냉전 이후 일본 안보정책의 방향은 미일동맹 강화 및 독자적 방위력 정비로 향하고 있는 바, 이는 지역 내 군비경쟁과 패권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냉전 이후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2004년판 방위계획대강은 중국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과 제휴하여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과연 미일동맹 강화가 동아시아에 새로운 냉전을 불러올지 아니면 지역질서 안정에 기여할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자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냉전 이후의 일본 안보전략은 대중 인식, 대북 인식, 미국과의 동맹관계 설정 등에 있어 한국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한일 간의 전략적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을 근거로 적극적인 후방지원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인식 차이는 한국의 안보전략 선택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2006/10/04) **KNSI**